

제23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6월 26일(금) 15시
- 장 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참석자 : 공동회장단교 18/23개교, 전체교 26/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국교련	상임회장	오홍식
2		사무총장	김경호
3		전문위원	함주현
4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철원
5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6		부회장	유원근
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성호
8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9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10		부회장	윤석주
11		사무국장	이정민
12		정책국장	이선애
13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14		부회장	김한제
15		부회장	조혜영
16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석호
17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유경숙
18		상임부의장	원명수
19		사무국장	조혜영
20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21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헌종
22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23			김인호
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희
25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26		대외협력이사	임정묵
27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홍균

28		부의장	오시영
29		사무처장	심왕근
30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31	전남대학교 교수회	정책연구원	정재우
32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창헌
33		부회장	소은선
34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고 전
35		정책처장	제갈윤석
36		교권.복지위원장	강영준
37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38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승복
39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40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41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42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종률
43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44		부회장	이상일
45		사무처장	안미정
46	한밭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이봉호
47		부회장	이준우
48		정책국장	김기태
49	정책위원	정책위원장	송기춘
50		정책위원	김대중
51		정책위원	김재수
52	자문위원	자문위원	권오현

I. 활동보고

－ 구두보고. 자료집 1~14p 참조.

활동보고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공립대학 현황자료 요청

활동보고 2. 공문발송 (국교련 ‘6월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활동보고 3. 공문발송 (교육부 의견서 제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공문을 국교련에서 송기춘 정책위원장의 의견을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국가 교육회를 만들고 국가 교육회에서 교육위원회 협업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선언하는 방안 추진중. 교육위원회 구성하는 법안 논의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을 기획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지지했다고 생각. 장기적인 일이자 안정적인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내용을 담는 기구가 되야함. 특히 교육적정책에 실패에 관련한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 인적인 회신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교육위원회 만드는 것은 교육부를 견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영리함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위원회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여러개의 나온 법안들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듦.
- 안민석 의원안은 과연 이 기구가 교육부의 정책을 중장기적인 것을 확고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의문이 생기는 방안이었음. 1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 여기서 결정한 것을 교육부가 반대했을 때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음. 자문위원회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 자칫 위원회를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전략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충돌과 갈등 문제. 교육위원회를 만든 것은 교육위원회에게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했던 것을 넘겨주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교육부가 집행하는 것. 장기적인 교육전망에 따라 현재의 정책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음. 교육부는 전혀 바뀌지 않고 권한도 인력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교육부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할 때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위원회 의결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 발생.
- 안민석 위원 안은 초중등과 대학입시까지가 중점적인 대상임. 고등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강조되어있지 않음.
- (요청) 국가위원회 발의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이 기제를 이용해서 교육부의 문제점, 대학의 지원같은 이유로 대학을 간섭했던 권한들을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방안을 같이 말하면 어떨까 제안. 이 기제를 활용해 교육부를 압박하고 국교련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면 어떨까 제안.

II. 보고사항

- 구두보고. 자료집 15~35p 참조.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 지난 1차 회장단 회의 경과보고 뒷부분을 이어서 진행
- 20대 국회 교원노조법이 통과됨. 22-23페이지에 개정 법률 내용 참조.
- 고용노동부가 다시 교원노조법 개정안 내놓음. 25-30페이지 내용 참조.
- 지난번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줄속적으로 만들어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3개의 교수노조가 의견 제출함. 31-35페이지 내용 참조.
- 추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의견 수렴해 정부에 목소리를 낼 예정.

III. 논의사항

논의사항 1. 대학 위기에 대한 성찰과 강사법의 시행 : 강사법의 향후 과제와 방향

- 자료집 37p 참조.
- 각 대학별로 여기 내용에 국한되지 말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때 41개교의 현안을 파악하고자 붙인 내용. 참고자료로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어떻게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각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람.
- 강사법 관련해서 제주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양성과 소수 학문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침해된 문제 발생. 대부분의 초기 강사들은 교수님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강사법 시행되고 나서는 대학원생들이 강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닫혀버린 것 같음. 이런 부분들이 국교련에서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와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길 바람.
- 국교련 입장에서 건의를 하려는 것은 실제 강사들의 드러난 문제점을 교육부에다가 알리는 쪽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려고 함. 강사노조와 관련없이 강사 채용 과정, 강사료 등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각 대학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알리려고 함.
- 대학의 교육의 질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 강사들 문제지만 교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질에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접근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보고하고 동의 얻으면 교육부에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거쳐서 보고 하는 것 동의.

논의사항 2. 서울대 법인화로 보는 대학 자율성과 재정확충

- 자료집 49p 참조.
- 법인화로 접근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 법인화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함. 모델이라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람. 2012년도에 법인화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 서울대 케이스가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는 없음.
-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법인화하면서 주위 규정을 조정하면서 변화해야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서울대학교는 국립 대학교 위치를 유지. 국립대학으로 책무를 유지하지만 대학운동을 자율화하고 거기에서 재정을 확충해 더 나은 대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요점. 따라서 법인화의 핵심 첫 번째는 자율화, 두 번째는 재정확충임. 그 목적으로 법인화 시작됨.
-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51페이지에 케이스로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음. 국립대학인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과 일반 사립대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비교가능.
- 대학 자율성과 재정확충의 문제가 포인트인데, 법인화 이후 서울대 운영에 대한 것이 바뀜.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서울대 예산으로 받아서 자율적으로 목관을 나누게 됨. 급여체계도 변화를 주고 있음. 특이한 사항이 대학 운영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됨. 매해 연구, 기획, 학생 등으로 나뉘서 외부인사의 평가를 받게 됨.
- 교육부의 대학운영 적극개입은 변하지는 않았음. 국정감사 피감이라는 신분 유지.
- 대학 자율화의 문제점은 법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거나 단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학 법인학법은 개정되었지만 학칙이나 규정과 같은 하위법이 그대로임. 따라서 정관과 학칙이 충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하부 규정이 국가의 법률과 연관되어 있어서 법인화를 위해 서울대 정관을 개정했다고 해도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함.
- 조직의 설치와 폐지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지만 조금씩 변화가 필요. 부총장이 3분이 되면 부총장들과 현재 차장들과 충돌이 생길 수 있음. 부총장이 한분에서 세분으로 늘어나면 간선이 생길 수 있음.
- 재정확충 문제는 국가에서 만든 것 외로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쓰고 싶다는 것이 개요인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결과적으로 핵심명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교직원을 채용했으면서 과연 정부의 교육방침과 상관없이 자율적인 대학운영과 재정운용이 가능할까?’라는 답이 잘되어야 함.
- 하지만 서울대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실임.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민영화가 아님. 재정자립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 있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대의 확실한 방법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뿐임. 서울대가 다른 국공립대학과 같이 법인화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함.

논의사항 3.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의 문제와 과제

- 자료집 61p 참조.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임용제청에 대해 재심의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 보냄. 하지만 교육부가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냄. 재심의를 하지 않을테니 다른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함.
- 현재 직무대리 운영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직무대리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임. 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은 아님. 그래서 부청장 시스템이 없는 공주대학교 경우, 교무처장이 직무대리 체제를 받게 됨. 그렇다보니 1인 2역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 부총장이 있다거나 법인체제였으면 자율적으로 운영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제도가 없음.

- 총장부제 체제를 언제까지 가야할지 모름. 그 피해가 교육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공주교육대학교의 주권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나와야 합당하지만 공주교대의 권력은 교육부가 임명한 직무대리로부터, 교육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냐고 묻고 싶음.
- 국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법과 원칙이 수립되어있지 않다고 보임. 그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그것은 국민과 대학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당하고 공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
- 국립대학교 총장 자리가 함부로 임명제청을 당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위기를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
- 공주교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에 면담 요청 후 시간 되시는 분들과 교육부장관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 같음. 그 후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성명서를 준비. 1차적으로 공주교대에서 준비. 임용거부 사유를 밝히려는 것을 문구로 해서 다른 것과 같이 준비.
-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여 법개정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므로 동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
-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동의하십니까. (전부 동의)
- 교육위원회 구성되었을 때 의원입법에 대해 요구할 것을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임.
- 판결이 나올 때쯤 성명서 준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부 동의)
- 총장 협의회 협조 공문 준비.

논의사항 4. 재정위원회 운영실태

- 자료집 82p 참조.
- 재정위원회 운영실태 문서로 올려주시기 바람.
- 국교련에서 양식 만들어 줘서 보내주시면 형식에 맞추어 보고 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

논의사항 5. 교연비 지급지연 관련

- 자료집 83p 참조.
- 교육부 문의했음. 경북대 교수노조에서 경북대 총장 앞으로 해서 공문 보냈던 것 참조.
- 교육부의 대답은 2달정도 늦어졌다고 얘기함. 41개 대학이 보낸 것이 다 달라서 7월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받음.
- 의구심이 들 경우 교육부 방문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학생 지도비 영역이 등록금 반환이라던지 예산 부족분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확인 바람.
- 국교련에서 총장협의회에 공문보내고 교육부에 확정할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람.

- 총장협의회에 공문 발송하겠음.
- 교연비 지급 현황 자료 공유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국공립 대학의 평균이 얼마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임.
- 국교련 차원에서 공문과 양식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람.

논의사항 6. 기타 논의

- 지난번 국교련때 총장 선출에 대해 얘기 나눴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

(답변) 계속 제안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을 것 같음.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채택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전체 동의)

이 안 채택.

- 교육부에서 거점 중심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기업 중심대의 앞으로의 진로라던지 위상, 위치를 어떻게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국교련 차원에서 정확해서 짚어주시고 기업 중심대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바람.
- 국교련이 거점중심대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년에도 교육중심대 이런 것으로 나누지 말고 국교련 하나로 가자고 말씀드림.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합치지 못했음. 최근 교육부 움직임을 봤을 때 대학 통합 여부는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점 중심대를 중심으로 의사나 정책이 집행되는 것 같음. 그 부분을 분명하게 국교련에서 거점중심대 개념이 뭐고 국립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앞으로 교육부는 어떤 정책으로 국립대학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었으면 좋겠음.
- 교육부가 지금 어떤 거점중심대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하는데 거점 중심대의 개념이 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어떤 근거에 의해 거점 중심대학이 생성되고 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이나 통합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따라야하는 것인지. 거점 중심대와 지역 중심대를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화가 있을텐데 그 과정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같이 듣자는 취지임.

(답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다른 학교와 공유를 해서 건의하겠음.

- 지교련과 국교련이 나뉘어져서 교육부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이런 모습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

(답변) 국교련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음.

<회의사진>

